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22-85-06

## 2022년 중국종합연구 총서 정책연구과제 요약집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22-85-06

**2022년 중국종합연구 총서  
정책연구과제 요약집**

인쇄일 2022년 12월 23일  
발행일 2022년 12월 30일  
발행인 김흥중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414-1114  
팩 스 044)414-1144  
인 쇄 일지사 ☎ 02-503-6971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비매품  
ISBN 978-89-322-5139-4 94320  
978-89-322-5080-9 (세트)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2022년 중국종합연구 총서  
정책연구과제 요약집

이 요약집은 2022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기획·수행한 협동연구사업의  
중국종합연구 총서 요약문을 한자리에 모은 것입니다.  
원문은 [www.kiep.go.kr](http://www.kiep.go.kr)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12년부터 중국종합연구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학제간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입니다.

‘중국종합연구’ 사업은 ① 한·중 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② 한·중 교육·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③ 중국 법·제도 연구 ④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⑤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⑥ 중국의 국내 정치 및 국제 관계에 대한 심층연구 등 6대 중점 분야로 나누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이 사업은 정치·외교,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명실상부한 중국 관련 융·복합 연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미·중 전략경쟁 시기의 탄소중립 전략, 수소에너지, 곡물 분쟁 등 글로벌 경제 현안과 북·중 관계 변화와 같은 시의성 있는 주제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한·중 협력전략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통일연구원의 5개 기관에서 22명의 전문 연구자와 8명의 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의 전문가들이 연구진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2022년도 연구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5개 국책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연구 과제를 모아 『2022년 중국종합연구 총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각 과제의 연구결과는 보고서로 출간하여 일차 수요처인 정부기관에 전달하는 한편,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본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종합연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금년도 중국종합연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수고해주신 5개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관계자, 국내외의  
공동 연구진, 심의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김홍중**

발간사 ..... 5

1.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규제의 제도와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 김윤권) ..... 9

2. 미·중 간 곡물 분쟁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두영) ..... 19

3. 미중 전략경쟁 내 중국 탄소중립 대외전략과 시사점(한국환경연구원 / 강택구) ..... 25

4. 중국의 수소에너지 산업 지원 정책과 한·중 협력 방안(에너지경제연구원 / 이상림) · 31

5. 미중 전략경쟁시대 북중관계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통일연구원 / 정은이) ..... 39

부록: 중국종합연구 발간자료 목록 2009~22년 ..... 47

1.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규제의 제도와  
정책을 중심으로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규제의 제도와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김윤권·이민호·홍성연  
北京丽翠商贸有限公司 이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양갑용

### □ 중국의 국정운영 차원에서 분석한 정부규제의 제도와 정책연구의 취지

- 본 연구는 중국의 정부규제 관련 제도와 정책 그리고 전략을 국정운영이라는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중국 규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이론적·정책적 논거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함.
- 이러한 연구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중국 정부규제 관련 이론적 검토, 실태분석, 규제거버넌스, 규제의 제도와 정책, 그리고 전략을 분석하는 내용으로 구성됨.
- 이러한 내용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궁극적으로는 중국 정부 규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중국 정부규제의 제도와 정책 및 전략은 중국의 국정운영에서 더욱더 중시되고 있다. 체제유지를 위해서이든, 중국 인민의 생활수준을 위해서

이든, 규제 객체의 역량을 높이거나 잘못된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든 규제는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 중국 규제의 제도와 정책은 비단 중국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하고 대응전략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 □ 중국 정부규제의 이해

### ■ 중국 정부규제의 특수성과 보편성 파악

첫째,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규제는 광범위하게 이뤄지며, 매우 중요한 정부 기능에 해당된다. 종전 규제형 거버넌스에서 거버넌스형 규제, 즉, 다원적인 거버넌스 주체의 개방적인 협력을 주장하고, 다양화와 차등화의 상호작용적인 규제 전략을 중시하고 있다. 둘째,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반독점을 견지하고 시장의 무질서 확장 추세를 막아야 하며, 중국 특색의 시장규제제도체계를 구축하여 정부의 규제 직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체주의 국가에서 시장개입은 부패, 비효율, 낭비, 혁신의 부재와 같은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부개입의 범위를 규정할 때 개입행위의 대체성, 개입행위의 불완벽성, 개입행위의 동태적 경합성이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영어 ‘regulation’은 중국에서 규제(規制), 관제(管制), 감관(監管), 규관(規管) 등으로 혼용되는데 먼저 ‘규제’는 주로 행정법학자들이 선호하는 반면, ‘관제’는 경제학자들이 선호하고, ‘감관(감독관리)’은 각종 당정 문건 등에서 주로 사용되고, ‘규관(규제관리)’은 주로 홍콩과 대만에서 사용되고 있다. 정부규제이론은 종전 규제 일원론에 기반을 둔 전통 정부규제

이론(정부의 강제력을 통한 규제시행 보장)에서 정부, 시장, 제3자(사회 등) 등이 규제권과 수단을 공유하는 규제 다원론으로 전환되고 있다.

## □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구조와 행위 이해

### ■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구조와 행위자 이해는 국정운영의 기제 파악에 도움

첫째, 중국이 정부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완비에 속도를 가하고, 국가거버넌스체계와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접근 중 하나다. 중국은 ‘거버넌스형 규제’의 발전과 완비를 통해 전통적인 운동식, 분절화, 일률적 행정규제의 폐단을 없애고, 효과적인 시장, 할 일 하는 정부, 유기적인 사회의 협동과 공동거버넌스 실현을 지향한다. 둘째, 정부규제의 주체인 중국공산당은 당국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규제, 통제, 관리가 필요하고 그러한 조직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완결된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일종의 통치 신화, 조직 신화를 갖고 있다. 중앙정부의 규제기구는 모두 중국공산당의 통일적인 영도에 복종해야 하고, 정부 행정서열에 속해야 하며, 이는 규제기구가 단지 상대적 독립성만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규제기구는 준입법권, 행정권, 준사법권이란 기본 권리를 갖는다. 지방정부의 경우 환경보호, 식품약품안전, 안전생산 등 전형적인 사회적 규제를 위해 중앙 또는 상급 관료체계는 하급 부문에 대해 종종 면담조치 방식을 통함으로써 규제 집중과 정책 교정의 목표를 실현한다. 셋째, 정부규제의 객체인 국유기업은 정부와 기업 분리, 정부와 자본 분리, 특히 경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혁을 실행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업계 특징에 따라 네트워

크와 운영 분리, 경쟁성 업무개방, 공공자원 배치 시장화가 관건이다. 민영기업의 경우, 재산권의 평등한 보호와 민영기업의 법률위반·법규위반 행위규제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시켜 민영경제를 발전 시킴에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 외자기업의 경우, 내부통제는 이사회, 관리자와 기타 직원이 실시한 재무보고의 신뢰성, 경영 효과와 효율, 현행 법규 준수 등의 목적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인 보증을 제공하는 과정이다. 완비된 기업 내부의 통제 환경을 구축하고, 재무 내부통제의 회계심사감독 수준을 높여 기업재무 내부통제의 전체 수준을 보증해야 한다.

## □ 중국 정부규제제도의 이해

### ■ 정부규제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첫째, 효과적인 정부규제는 국가거버넌스체계와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내용이고, 법에 따른 규제는 현대 정부규제의 기본 특징이다. 정부규제의 법률제도체계는 헌법을 지도로 하고, 법률을 기초로 하며, 법규, 규장, 규범성 문건과 강제성 규제기준 등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유기적 총체이다. 정부규제 법률제도체계 개선을 위해서 입법심사제도 강화, 정부규제 관련 중앙입법과 지방입법의 협조관계, 정부규제 법률제도체계의 형성, 거버넌스 기반 규제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규제와 관련된 핵심 제도인 공평경쟁심사제도는 권력의 배치, 규제 모형 및 규제 도구의 선택 등 구체적인 작동 측면의 변혁, 산업규제 효율화, 중국 국가 거버넌스체계와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 건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신용규제제도는 시장 주체의 신용정보에 대해 규제기관이 수집·평가하고, 이에 기초하여 분류 규제를 취하고 상응한 장려, 징계를 부여하여,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 규제 방식이다. 그리고 행정심사비준제도는 시장 주체에 활력을 자극하고, 시장경쟁 환경을 개선하며,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추진하는 작용 기제이다. 셋째, 중국 정부규제체계는 여전히 정부규제 법률법규제도의 미흡, 규제 근거 부족, 정부규제기관 권력배치의 비합리성, 다수기관 관여, 여전히 전통적인 행정관리 방식 위주, 정부규제기관에 필수적인 규제 기제 부족, 과학적인 정부규제 실적평가체계 미흡, 합리적인 규제 실적평가 부족 등의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중국 정부규제체계 개혁은 관제형 규제에서 거버넌스형 규제로 전환하고, 규제완화와 규제의 품질을 개선하며, 더 나아가 ‘더 좋은 규제’ 이념을 수립하여 ‘더 좋은 규제’의 원칙, 절차와 방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 중국 정부규제 정책의 이해

### ■ 산업정책 및 경쟁정책 그리고 정부규제 정책수단

첫째, 중국의 당중앙과 국무원은 산업정책 수립, 국유기업 개혁, 대외 개방 등 중대한 개혁조치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독점보다는 경쟁, 중립 등 원칙을 강조한다. 중국의 국유 중대형 기업이나 민영기업 심지어 혁신 기술 기반 핀테크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 모두 공정경쟁을 견지하고, 경제 주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시장경쟁을 통해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규제를 실행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경쟁정책은 주로 시장경쟁 장애를 제거하여 자원배치에서 시장이 진정으로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반면, 산업정책은 주로 정부주도 역할을 하고 정부가 그 인지 수준에 따라 주도산업 또는 지역 내 기업에 중점적인 지원을 한다. 이는 시장

경제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자원배치에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셋째, 중국 규제정책의 수단(도구)은 정부가 효율과 공평의 관리 목표에 따라 불완전 경쟁, 외부성과 정부비대칭 등 시장실패를 관리대상으로 하며, 행정권력을 통하여 시장의 분배 기제 및 기업 활동의 일반 규칙과 특별 행위에 직접 간섭한다. 전통 규제도구는 강제성이 커서 기본 권리와 자유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앞으로 규제도구 및 규제수단의 다양화를 중시해야 하고, 여러 규제도구를 종합적·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규제도구의 동태적 조합과 최적화를 통해 규제 거버넌스의 ‘타당한 관리(善治)’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 □ 중국 정부규제 전략의 이해

### ■ 중국 정부규제의 현안진단과 전망

첫째, 중국의 규제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주의 국가체제의 특성상 법규에 의한 규제보다는 당과 정부의 기능을 통한 ‘통제’에 더 크게 의존한다는 점이다. 쌍순환 전략하의 경쟁법은 발전의 촉진에 기여하면서 규제성, 포용성, 필요성 등을 주장한다. 경쟁법은 외부적으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요인을 반영하고 내부적으로는 각 단계 부분의 최적화와 조정을 지속해야 한다. 공유경제와 정부규제에서 공유경제가 급속히 발전했으나 무분별한 성장, 규제 회피, 마이너스 외부성 등 많은 난맥상을 빚고 있다. 공동부유를 달성하려면 소득분배, 즉 유동량의 분배가 아닌 자산분배, 즉 비축량의 분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둘째, 정부규제 변혁은 제도형 개방을 이끄는 핵심이며 정부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개선해야만 시장 주체를 위해 양호한 국제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보다 높

은 차원의 개방형 경제를 발전하며, 중국 및 국제 쌍순환의 양호한 상호 작용의 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 중국의 글로벌 규제 전략 방안에는 규제 기준 완비 및 규제의 시장화·법치화·국제화 추진, 규제절차 최적화 및 사전·사중·사후의 모든 사슬(链接) 규제 구축, 규제도구 혁신 및 정부 규제 방식 개선, 국제규제협력 강화 및 규제 결과 상호인정 등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의 국제규제협력 추진을 위해 기술규제 및 표준의 제정이 나 변경에 따른 국제무역에서의 영향요소가 꾸준히 증대되고 있는 상황, 규제사안을 먼저 통보하고 추가적으로 관련 기준이나 부속 사항을 보충 하기보다는 기술기준 및 표준 전체를 일괄적으로 통보하는 방식, 식품변 질에 따른 통관거부, 서류미비에 따른 통관거부 비중이 다른 주요 국가들 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중국 수출입 전문성과 역량을 확보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 □ 중국 정부규제의 강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 ■ 규제제도 발전 및 정책적 제언

첫째, 우리나라 규제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발전 모형으 로서 규제적 복지국가의 방향 설정 및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고, 지능형 사회 대응을 위한 우선 허용 및 사후 규제의 원칙과 스마트 규제의 실천 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또한 규제거버넌스의 분권화 및 체계적 조정이 필 요하고, 비공식적인 규제도구의 활용과 협력적 규제거버넌스의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중국과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는 외 자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 의무 확대 가능성에 대한 대응 노력이 필요하 며, 공평경쟁심사제도의 도입 및 플랫폼 기업 규제 강화에 따른 대응방안

을 모색하고, 신용규제 강화에 대응하는 신용정보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무역장벽(TBT) 대응을 위한 중국과의 다각적인 국제규제협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 2. 미·중 간 곡물 분쟁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 미·중 간 곡물 분쟁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두영·전형진·김상현·김종진·김범석

### □ 미국과 중국 간 WTO 곡물 분쟁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농업 발전을 위한 국내 제도 개선 및 국제규범과의 합치성 제고 방안을 도출할 필요

- 미국과 중국 간 중국의 밀·옥수수·쌀에 대한 국내보조 및 TRQ 관리 방식의 국제규범 위반 여부를 두고 2016년 시작된 WTO 분쟁을 분석함.
- 우리나라 농업보조 및 TRQ 관리제도의 개선 및 국제규범과의 합치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심화 및 WTO 곡물 분쟁 발생

세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에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양국간 농식품 무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농식품 교역에서 미·중 간 갈등은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경제적 성장에 따른 국제적 영향력 확대 및 중국의 식량 안보 전략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 및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과 충돌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두 국가 간 무역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두 국가에 대한 농식품 수입 의존도가 높아 분쟁의 결과는 우리나라 농업 통상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두 국가의 농식품 분쟁이 우리나라 농업에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두 국가의 분쟁에 대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미·중 간 무역 갈등 중 중국의 밀·옥수수·쌀에 대한 국내보조와 TRQ 관리방식의 국제규범 위반 여부를 두고 2016년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WTO 분쟁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미·중 간 곡물 분쟁 배경과 과정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농업 발전을 위한 국내 제도 개선 및 국제 규범과의 합치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중국의 곡물 보조금에 대한 분쟁과 정책적 시사점

먼저, 중국의 곡물 보조금에 대한 분쟁(DS511)은 중국의 밀, 옥수수, 쌀 대상 국내보조 규정에 대해 미국이 제소한 분쟁이다. 미국은 중국이 밀, 중·단립종 쌀 및 장립종 쌀, 옥수수 등의 시장가격지지(MPS)가 품목 특정 최소허용보조(DM) 지급 가능 수준인 해당 품목 생산액의 8.5% 수준을 초과하여 국내보조 약속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 분쟁의 핵심 쟁점은 중국이 MPS 계산을 위해 적용한 품목별 적용대상생산량(QPE), 고정외부참조가격(FERP) 등이 WTO 규정 및 양허 내용과 일치하는가의 여부이다. 이는 각국의 국내 농업보조정책에 WTO 규정 및 양허(이행계획서) 내용과의 일치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농업보조금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국내 농업보조 운영실태 및 통보 내용이 WTO 규정과의 일치성

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국내 농업보조의 중심이 허용보조 중심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허용보조로 분류된 국내 농업보조정책이 감축보조로 재분류될 가능성을 검토하고 보조 사업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식량안보를 위한 밀, 콩 등의 식량작물에 대한 자급률 증대 정책 설계에서 AMS와 허용보조의 효율적 조합을 모색해야 한다. 직불제 개편으로 AMS 운용에 여유가 있는 만큼 AMS 및 최소허용보조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을 모색함과 동시에 허용보조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가 통보하고 있는 농업보조금에 대한 WTO 규정 및 양허 관련 WTO 논의 동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범 관련 최근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중 곡물 분쟁으로 인한 국제곡물시장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미·중 곡물 분쟁으로 인해 중국의 곡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수입량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국제곡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한 국내 곡물 생산기반 확대, 비축 확대, 해외곡물 유통망 진입 등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 중국의 TRQ 관리제도에 대한 분쟁과 정책적 시사점

중국의 TRQ 분쟁(DS517)은 미국이 중국의 밀, 중·단립종 쌀 및 장립종 쌀, 옥수수의 TRQ 관리방식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제소한 사건이다. 미국은 중국이 양허표에 명시된 시장접근물량을 보장하고, 소비자 선호 및 최종사용처를 반영하고 효과적인 수입기회를 제공하는 관리 절차 및 요건과 명시된 기한을 적용하여 시장접근물량을 투명하고, 예측가

능하고, 일관적이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으로 관리한다는 약속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 분쟁의 핵심 쟁점은 중국의 TRQ 관리방식이 투명성, 예측가능성, 공정성, 명확성 등 WTO 규범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이다. 이는 수출국에는 최소 시장접근기회를 보장하고, 수입국에는 해당 품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운영되는 TRQ 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미·중 간 TRQ 분쟁은 우리나라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우리나라 TRQ 관리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품목에 따라 수입허가제, 국영무역, 생산자 단체 방식 등 다양한 관리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TRQ 관리방식이 투명하게 운영되어 분쟁의 요소가 없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품목별 이행률 검토를 통해 품목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TRQ 이행률은 품목에 따라 낮은 경우도 존재하여, 미소진 메커니즘 원칙에 의해 수출 상대국의 관리방식 변경 요구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품목별 이행률 제고 방안 검토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통상 분쟁의 여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농업의 식량안보 강화라는 관점에서 WTO TRQ 물량 관리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TRQ 제도가 해당 품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TRQ 품목 범위 및 관리방식, FTA TRQ와의 중복 문제 및 상호연관성, 국내 식량안보에 미칠 영향 등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 3. 미중 전략경쟁 내 중국 탄소중립 대외전략과 시사점



## 미중 전략경쟁 내 중국 탄소중립 대외전략과 시사점

한국환경연구원 강택구·심창섭·이정석·장원석·박준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정가웅  
호서대학교 전가림

- 미·중 전략경쟁시대 양국의 갈등 또는 협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탄소중립 이슈를 중국의 대외전략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우리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외교적 전략이 필요한 시점

미·중 전략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군사안보, 경제 및 무역, 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간 갈등과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 등을 통해 중국이 경제적·외교적·군사적·기술적 수단을 활용하여 미국의 안보와 번영의 핵심지역인 인도·태평양에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나아가 중국을 기존의 미국 중심적인 국제질서를 수정할 의지를 갖고 있는 수정주의적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경제 및 무역 분야에서도 중국의 추격세가 만만치 않다. 현재로서 중국은 2030년에 이르러서는 미국의 명목상 GDP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 역시 최근 미·중 양국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분야로 미국은 중국을 증대한 도전자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탄소중립 2060'을 발표하였다. 2020년 9월 22일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은 제75차 유엔총회에서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30년에 정점에 도달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탄소중립 분야는 미·중 양국의 협력 이슈일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 양국관계에 있어 갈등적 요인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탄소중립은 양국의 경제와 산업 전반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진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글로벌 아젠다 주도권 확보를 위한 양국간 세력 경쟁과 연계될 휘발성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다. 탄소중립은 기술-산업-통상-국제표준 등 다양한 이슈와 연계되어 미·중 전략경쟁 구도 속에서 전통적인 군사안보 이슈와 함께 갈등의 이슈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 미국과의 동맹 강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2022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하는 한국에게 있어 미·중 갈등은 우리 정책 선택의 여지와 이익의 공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유념하여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 중국은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에게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의 중국화를 통한 표준 형성과 확산으로 역내 위상을 제고하면서 역내 리더 역할을 추구하는 전략적 자세 견지**

중국은 탄소중립을 단기간 내에 미국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통한 글로벌 차원의 도전을 진행하기보다는 지정학적으로 자국에게 유리한 일대일로 연선국가를 중심으로 협력을 진행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과의 경쟁을 대비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은 2013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이후로 일련의 생태문명 이념을



포함한 관련 문건을 발표하였다. 중국 중앙정부 부처들의 정책들과 중국이 주도하는 다자협력 플랫폼들을 통해 일대일로에서의 저탄소 녹색 프로젝트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을 대상으로 기술 등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자국 산업의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자국의 위상 제고와 지역 내 영향력 확대를 통한 강대국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 □ 중국 탄소중립 대외전략에 대응하는 우리의 정책적 시사점

##### ■ 글로벌 규범과 원칙에 입각한 전략에 기초한 중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로 접근

미·중 간 협력과 경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은 선진국이면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에 맞는 글로벌 규범과 원칙에 입각한 전략에 기초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여 미·중과의 협력을 추진한다.

##### ■ IPEF 참여 등 다양한 경제협력체 참여를 통한 미국과의 협력 강화

미·중 전략경쟁에서 우리의 경제안보적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협력체 참여를 통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에게 미칠 산업별 영향에 대해 다각적인 진단과 조치를 강구하며, 국제정치경제적 시각을 갖춘 협상팀 구성이 필요하다.

##### ■ 중국과의 지속 가능한 경제협력도 모색

중국과의 협력에서 무엇보다도 글로벌 위상에 맞는 한·중 간 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의 교역과 협력에 관심을 두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급망 다원화 노력을 병행한다. 대중 무역 및 공급망 의존도가

높아 단기간 내에 탈중국화는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경제안보분과위원회’ 추가 설치

기존 국내적 현안과 대응에 집중되어 있는 기구를 국제 관계와 관련한 이슈가 생태환경 이슈를 넘어 외교와 경제안보적 차원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특히 탄소국경세와 같은 새로운 무역 규범에 대한 경제안보적 대응 차원에서 관련 기구 정비가 필요하다.

■ ‘동아시아 기후위기 대응 협력체(가칭)’ 구축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관련한 이슈에서 주도권을 확대하는 등 중국의 발언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동아시아에서 우리의 위상 제고를 위해 동아시아 주요 국가가 참여하는 ‘동아시아 기후위기 대응 협력체(가칭)’ 구축을 고민한다.

■ 중국의 탄소중립 실현에 따른 새로운 산업적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

한국이 국제적 상황에서 이슈를 선점하고 표준화를 위한 제도화의 문제를 주도한다면 국제적 위상과 외교·안보 역량에 도움이 될 것이다.

## 4. 중국의 수소에너지 산업 지원 정책과 한·중 협력 방안



## 중국의 수소에너지 산업 지원 정책과 한·중 협력 방안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상림, 안지영, 허예진, 양연빈, 이성규  
중국 칭화대학교 Xunmin Ou

### □ 중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수소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로 정부 주도로 수소산업 발전 추진

중국은 정부 주도로 수소산업 발전을 추진 중인 국가 중 하나로 현재 전 세계에서 수소를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 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수소산업 관련 정책을 발표하여 주목받고 있다. 중국의 수소 수요는 2020년 기준 전 세계 수소 소비량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석유 정제 및 화학 부문에서 소비되었으며 에너지원으로서의 수소 소비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중국의 수소 공급은 주로 석탄(60%) 및 천연가스(25%) 등 화석연료 기반의 개질수소이며 나머지는 석유 정제 및 화학 부문(주로 암모니아나 메탄올 생산 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생산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중국은 2021년 3월,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에서 최초로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의 하나로 포함시켰으며, 2022년 3월에는 중국 내 중앙정부 차원으로는 최초로 ‘중장기 수소에너지계획(2021~2035년)’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에서 중국은 세계 1위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국가로

저탄소 청정수소 공급 잠재력이 높고 수소에너지 산업도 발전 양상을 보이지만 종합적으로 자국 수소에너지 산업은 발전 초기 단계로 평가하며, 2025년까지 연료전지차 5만 대 보급, 연간 그린수소 10만~20만 톤 생산, 이산화탄소 배출량 연간 100만~200만 톤 감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예상보다 계획 규모가 크지 않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현재 대부분 석탄 기반 그레이수소를 생산하고 있지만 향후 그린수소 생산 잠재력도 높을 것으로 평가**

중국의 수소에너지 공급 부문은 전반적으로 석탄 가스화 방식을 통해 수소를 생산하고 있으며 경질탄화수소(프로판 탈수소화, 에탄 분해), 클로르-알칼리 화학, 코크스 가스, 암모니아 및 메탄 합성 등 전통 석유화학산업의 기술을 바탕으로 부생수소 생산에 유리한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중국 산업 부문의 부생수소 공급 잠재량은 2020년 기준으로 중국 전체 수소 소비량의 약 18%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며, 화석연료 기반 그레이수소 생산 비용은 전 세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중국 내 수소 생산 및 공급 여건은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청정수소 생산 전환이 필요한 상황으로 알카라인 수전해 기술의 성숙, 전해조 제조비용 및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의 하락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청정수소 생산 잠재력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BNEF(2022b)는 그린수소 생산 비용이 블루수소 생산 비용보다 낮아지는 첫 번째 국가로 중국을 꼽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생산 비용이 높게 예상되기 때문에 2030년이 되어서야 그린수소 생산 비용과

블루수소 생산 비용 간 증가(cost parity)가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수소는 석유 정제 및 화학 부문에서 대부분 소비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수송 및 산업 부문에서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

수송 부문에서 현재 수소연료전지차는 정부의 보조금과 정책 지원에 의존하여 발전하고 있지만, 향후 연료전지기술의 발전 및 규모의 경제 효과에 따라 생산단가가 하락하여 시장원리에 따른 자체적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소연료전지차 보급과 관련하여 가장 큰 걸림돌은 수소 충전소의 부족이다. 산업 부문에서 중국은 세계 최대의 철강, 시멘트, 합성 암모니아 생산국으로 심층 탈탄소화 확대를 위한 혁신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그린수소 공급과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며 철강산업의 전면적 재배치가 요구되므로 중국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발전 및 난방 부문에서의 수소 활용은 아직 기술이 성숙하지 않은 연구 개발 단계이거나 시범사업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 **향후 한·중 양국의 중점 협력가능 분야는 수소연료전지차 개발 분야, 그린수소 생산 분야, 국제규범 마련을 위한 국제협력 분야, 수소에너지 건물 분야 등인 것으로 평가**

■ **수소연료전지차 개발 분야**

수소연료전지차 개발 분야에서 한국은 연료전지차의 생산기술과 응용, 관련 기업의 국제협력과 투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양국은 연료전지차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소에너지 개발에서 각자의 강점을 최

대한 발휘하여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및 혁신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관련 국제 기업과의 협력, 교류 및 투자를 강화하여 양국 연료전지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 ■ 그린수소 생산 분야

그린수소 생산 분야에서 수전해 기반의 그린수소 생산은 양국 모두 실증 연구 단계에 있으며,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프로젝트 발굴을 통한 안정적인 수소 공급 시스템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저비용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데,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여건이 좋지 않고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력비용이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린수소 생산기술 개발 및 상용화 프로젝트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반면 중국은 광대한 영토의 이점을 활용하여 풍력, 태양광, 수력, 바이오매스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전원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수소 생산 여건이 좋은 국가로 평가된다. 중국과 한국은 태양광 기반 수전해 수소 생산, 해상 풍력 기반 수소 생산 등 그린수소 생산 분야에서 기술협력과 연구교류를 강화하여 각자의 강점을 살려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 ■ 국제규범 마련을 위한 국제협력 분야

향후 수소 및 수소 제품 교역 등 글로벌 수소 경제와 관련하여 한·중 양국은 국제규범 마련을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2020년 12월 청정수소 인증제를 전 세계 최초로 제정한 바 있으며, 중국 수소연맹은 ‘저탄소 수소, 청정수소 및 재생에너지원 수소의 표준과 평가’를 통해 수소 분류기준을 발표하고 시행해왔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청정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인 정책수단이기 때

문에 한국은 현재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수립 중에 있으며, 청정수소 인증제에 필요한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방법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진행 중이다. 양국의 청정수소 인증제도 수립 과정 및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제도 도입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술적·학술적·정책적 이슈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 ■ 수소에너지 건물 분야

마지막으로 수소에너지 건물 분야에서 중국은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분야에 거대한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분야는 한·중 양국의 전통적인 협력 분야이다. 특히 중국과 한국은 제로 에너지 건축물·넷제로 에너지 빌딩의 기술 개발 및 실증 추진, 청정 난방 등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협력할 수 있으므로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꾸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 □ 양국간 협력 분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 기업 간 기술·사업 협력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 사업 추진 필요

양국의 수소에너지 산업 정책과 여건을 살펴볼 때 한·중 수소에너지 협력은 일본 토요타자동차의 중국 시장 진출 사례를 참고하여 민간 기업 간 기술·사업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자동차의 광저우 HTWO의 완공으로 광저우 내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이 가능해질 경우 한·중 기업 간 수소연료전지 승용차 및 트럭의 연구개발, 생산 및 판매 관련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국의 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분야의 중앙 및 지방정부의 보조금 지원 등 구체적인 정책이 발표되고 건물용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다면 한·중 기업 간 활발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중국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써 효과적인 수소에너지 협력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중국의 지방정부 수소에너지 지원 정책은 지역별로 구별되는 특징을 보이므로 이를 잘 파악하여 최적의 진출 지역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HTWO 광정 사업과 같이 수소연료전지차 개발 및 판매가 목적이라면 수소연료전지 부문 공동 연구 및 산업 단지 구축이 가능한 지역을 파악하여 지방정부와 MOU를 체결할 수 있으며, 그린수소 생산이 목적이라면 산동성 및 지린성 등 재생에너지원이 풍부한 지역에 진출하여 저렴한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 정부와 협의할 수 있다.

양국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한·중 수소 산업 협력은 핵심기술을 공유하고 공동 개발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술 유출에 유의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여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지 않는 수준에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광둥성에 구축된 현대자동차의 수소연료전지 생산기지 이외에 연료전지 선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산동성, 광둥성, 광저우시, 그리고 해외 수소 수입 터미널 등 인프라 구축을 계획 중인 상하이시 등 잠재적인 협력 전략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 채널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글로벌 공급망은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으로 경제 안보 차원에서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5. 미중 전략경쟁시대 북중관계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 미중 전략경쟁시대 북중관계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통일연구원 정은이·전병곤·이무철·이재영

한양대학교 신중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이기현

세종대학교 최필수

□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구조화 추세 속에서 북중관계 역시 더 밀착되고 공고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상황에서 미중 전략경쟁이 북중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통해 향후 우리 정부의 정책 방안 제시가 필요

- 국제질서 구조의 변화와 북중관계 역사적으로 고찰
- 최근 구조화되는 미중 전략경쟁이 북중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분석
- 북중 정치·안보 및 경제사회 분야에서 제기될 수 있는 핵심 쟁점을 발굴하여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고 시사점 도출
- 우리의 대응방안을 도출하여 정책적으로 기여

본 연구는 큰 틀에서 보면 미중 전략경쟁시대 북중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마련이며, 이를 위해 다음 네 가지 대주제와 관련된 핵심 명제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역사적 고찰을 통해 국제질서 구조 변화가 북중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① 국제질서 구조 변화에 따른 미중 관계의 특징은 무엇인가? ② 국제질서 구조 변화에 따른 북중관계의 지속·변화 요인은 무엇인가? ③ 미중 전략경쟁시대 북중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둘째, 미중 전략경쟁의 도래가 북중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질문을 제시하였다. ① 중국과 미국은 미중 전략경쟁에 대해 각각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②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인식이 상대방의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③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구조화 추세하에서 향후 북중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셋째, 미중 전략경쟁시대 북중 정치·안보 및 경제·사회 분야에서 제기될 수 있는 핵심 쟁점 열 가지를 발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 두 가지 질문을 제시하였다. ① 미중 전략경쟁하에서 북중 간 핵심 쟁점을 둘러싼 현황과 특징은 무엇인가? ② 미중 전략경쟁하에서 북중 간 핵심 쟁점의 현황과 특징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넷째, 미중 전략경쟁시대 북중관계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질문을 제시하였다. ① 미중 전략경쟁시대 한국의 대외전략 목표와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② 미중 전략경쟁시대 북중관계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중국 정책의 목표와 방향 및 전략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③ 미중 전략경쟁시대 북중관계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북정책의 목표와 방향 및 전략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 □ 역사적 고찰을 통해 국제질서 구조 변화가 북중관계에 미치는 영향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북중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국내적 요인으로는 최고지도자의 높은 비중, 둘째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환경의 영향, 셋째 지정학적인 측면에서의 한반도의 가치 변화이다. 특히 지정학적 측면에서 한반도의 가치는 미중 간 상호 견제와 경쟁이 치열할수록 북중관계의 변화를 이끄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었다. 한편 미중 전략경쟁시대 북중관계의 주요 쟁점은 첫째, 미중 전략경쟁을 바라보는 중국과 북한의 인식 및 그것이 상대방 정책에 어떻게 상호 반영될 것인가의 문제, 둘째 미중 전략경쟁시대의 도래가 북중 정치·안보, 나아가 경제·사회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의 문제였다.

## □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인식과 그러한 인식이 각 정책에 미치는 영향

전통적으로 북한은 중국에 전략적 자율성을 가져왔고, 북한 특유의 자주외교 노선을 강조해 왔다. 이와 더불어 북한은 핵 군사 모험 노선을 통해 현재의 미중 갈등 구조를 더욱 이격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과거 트럼프 행정부 초기처럼 실제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투입시킬 경우, 북한은 중국에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전략적 부담으로 기능할 가능성 농후하였다. 중국에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로 인한 갈등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나, 중국 입장에서 자국의 핵심 이익인 홍콩, 위구르, 타이완, 남중국해 문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문제까지 미국과 충돌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주변부 이익인 북한을 위해 미국과 고도의 갈등 초래를 희망하지 않을 것이다. 즉, 중국은 북한을 미국과의 협력 카드

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국이든 북한이든 현재 국면에서 양국의 이해가 일치했고, 전통적 이익동맹의 논리가 작용하여 북중관계가 밀착된 상황을 냉정하게 이해해야 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북중관계 밀착도 결국 일시적이며, 이해가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관계는 해체될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되므로 북중관계 밀착이 우리에게 손해라고 한다면 양국의 이해 일치를 이격시키면 된다. 북한은 언제든지 이해관계에 따라 중국을 방기할 수 있는 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에게 남은 답은 남북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이고, 그래서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에 포커스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시대에 북한이 중국에게 계속 전략적 자산으로 기능할 것인가? 라는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와 더불어 북중관계 밀착도 결국 일시적이며, 이해가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관계는 해체될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된다. 결국 우리에게 남은 답은 남북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 미중 전략경쟁시대 북중 정치·안보 및 경제·사회 분야에서 제기될 수 있는 핵심 쟁점 및 현황

첫 번째 쟁점은 미중 전략경쟁시대 북중관계에서 북핵 문제이다. 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이며 북중 모두에게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다. 중국이 미국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중 북핵 이슈의 효과는 여전히 유용한 동시에, 북핵 문제로 인한 한미일 동맹 강화에 따른 대중 압박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또한 북중 밀착을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대

북 추가 제재를 저지하는 데 중국의 지지와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 쟁점은 미중 전략경쟁시대 북중관계에서 신홍안보 협력 문제이다. 기후변화와 감염병 예방과 같은 보건 등 부문에서의 신홍안보 협력이다. 이는 미중 간 협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큰 이슈로서, 미중 간 신홍안보 협력이라는 큰 틀 속에서 북한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비전통 안보 협력이 북핵 문제와 같은 전통 안보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쟁점은 미중 전략경쟁시대 북중관계와 한중관계의 관계이다. 이는 우선 한국의 입장에서 한중관계의 전략적 소통 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 도발을 통제하고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견인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중국은 북중 밀착 속에서 북한 카드를 활용하여 한국의 대미 경사를 저지하고, 한국이 북한 문제와 북핵 문제에 있어 중국의 협조를 구하도록 만들기 위해 북중 밀착을 적극 활용할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 쟁점은 북중 간 우호 협력관계의 지속 여부이다. 북중관계 역사를 볼 때, 북중 양국은 전통적 우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관계가 소원하거나 밀착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 현재 북중 양국이 상호 간의 우호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관계의 지속 및 강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호 간의 '전략적 불신'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다섯째, 북중관계와 한미동맹이다.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최근 북중관계에 나타나고 있는 '밀착' 추세는 한미동맹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미중 전략경쟁시대 한미동맹 강화와 한국의 반중국연대 참여는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전방위적 압박과 보복 조치를 불러올 수 있다. 나아가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도 좌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미중 전

략적 경쟁이라는 구조 아래 북중 간 긴밀한 협력 강화가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 나아가 통일 문제에 미칠 영향도 우리에게서 주요 관심사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 한반도 통일 문제를 구분하여 각 문제에 북중관계 강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일곱 번째, 북중 무역과 북한 경제이다. 북중 경제관계와 중국의 대북제재 참여에 대한 틀 속에서 대중적자의 지속 가능성,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상황, 미국의 제재 요구에 대해 중국의 조치 등을 주요 쟁점으로 분석하였다. 경제협력 부문에서는 중국의 대북 직접투자와 접경지역 개발협력 및 북한 노동력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북한의 대외개발 관리 리스크, 북한의 정책 일관성 리스크, 개방 속도조절 리스크 등을 쟁점으로 거론하였다. 한편 북중 인적교류와 관광협력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북중 관광 협력의 조만간 재개 가능성, 대북제재의 틀 속에서 북중 관광의 확대 가능성, 북중 관광 확대의 대중경제의존도 심화문제, 남북중 3각 협력으로 확대될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북중 발전전략에서는 초기 조건의 차이가 북한에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의 도입과 적용을 막을 것인가, 그리고 미중 전략경쟁하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협력이 담보될 수 있는가 등의 쟁점이 거론되었다.

## □ 시사점

본 연구는 다음 세 가지 차원에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의 대외전략 차원에서의 고려 사항이다. 이에 대해 미중 간 전략적 경쟁 대비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과 영향력 확보의 필요성, 미중 간 전략적 경



쟁 아래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발전의 균형 모색을 제시하였다. 둘째, 한국의 대중국 정책 차원이다. 이에 대해 미중 및 북중관계의 상호 작용과 함수관계에 대한 전략적 고려, 미중 전략경쟁시대 한중 협력의 재설계와 유인문제, 한중관계 관리와 남북관계 정상화의 필요성 대중 견제와 한미 동맹을 활용한 북핵 문제 접근법, 지방 차원에서의 접근 모색, 생태관광과 남북중 그린데탕트 구성, 신항안보 분야에서의 남북중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대북정책 차원이다. 이에 대해서는 북한 변수에 대한 전략적 고려의 필요성, 비제재 영역에서의 북한과의 교류 재개 모색, 북한과의 불신 해소 관리 및 대화 재개의 동시 모색 등이 필요하다.

# 부록



# 중국종합연구 발간자료 목록

2009~2022년

2009~2011년 발간된 중국종합연구의 자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홈페이지 (<http://www.nrc.re.kr>) 협동연구총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2012~2022년 발간된 중국종합연구의 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iep.go.kr>) 연구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 2009년 협동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09-01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 1 / 이장규 외

09-02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 2 / 이장규 외

09-03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 3 / 이장규 외

산업연구원

09-04 부품소재산업의 중국시장 분석과 진출전략 연구 / 이문형·김화섭·김석진·김학기·조철

09-05 중국 부품소재 산업별 지역별 현황과 주요 제조업체 디렉토리 / 김화섭

09-06 중국 부품소재 유통구조 분석과 주요 유통업체 디렉토리 / 김석진

09-07 대중국 부품소재 수출 매뉴얼 / 이문형

09-08 중국 부품소재산업 이슈리포트 / 김학기·조철

에너지경제연구원

09-09 한중 에너지 협력 연구 대 중국 에너지 산업 진출 방안 1 / 박용덕 외

09-10 한중 에너지 협력 연구 대 중국 에너지 산업 진출 방안 2 / 박용덕 외

해양수산개발원

09-11 한중 물류협력 연구(총괄보고서) / 김범중·김운수·이주호·김찬호·김근섭·최영석·박지윤

■ 2010년 기초연구

- 09-12 한중 물류협력 연구(별책보고서) / 김범중·김운수·이주호·김찬호·김근섭·최영석·박지운
- 국토연구원
- 09-13 한중 공동발전을 위한 국토전략 연구 / 이상준·김원배·김동주·정일호·서민호·신혜원
- 10-01 21세기 중국의 통치방식 변화: 정치·행정·법제의 종합적 분석 / 조영남(서울대)
- 10-02 중국의 아시아지역전략과 우리의 미래전략구상의 적합성 식별 / 윤덕민(일민연)
- 10-03 중국의 권력엘리트 총원문화·재생산 매커니즘과 그 정책적 함의 / 안치영(인천대)
- 10-04 중국 5세대 및 제6세대 지도부 분석과 외교정책 전망 및 한중관계에 대한 함의 / 신중호(경발연)
- 10-0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제도환경 변화와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 서봉교(동덕여대)
- 10-06 중국경제의 발전동력으로서의 기업 / 강영삼(서울대)
- 10-07 중국 산업의 '추격' 전략과 한국기업의 대응: 자동차와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 은중학(국민대)
- 10-08 중국진출 구미·일·한 기업사례분석을 통한 중국사업 성공 방안 도출 / 정상은(한남대)
- 10-09 중국 조선기업 경쟁력 분석을 통한 한국 중소형 조선기업의 합리화 방안 연구 / 신정식(보경연)
- 10-10 한중 양국의 무역결제시 양국통화결제 연구 / 구기보(숭실대)
- 10-11 한중무역에서 원화 및 인민폐의 무역 결제통화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 김홍기(한남대)
- 10-12 중국의 식품안정성 관리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 고재모(협성대)
- 10-13 중국 IT 전자사전 발간사업 / 모영주(건흥)
- 10-14 재중 한인사회 연구: 코리아타운 지역을 중심으로 / 백권호(영남대)

- 10-15 한중 양국간 문화마찰 해소를 위한 소통모델 연구 / 남종호(한국외대)
- 10-16 중국 한류의 성과평가와 지속적 확산을 위한 종합적 정책방안 / 윤경우(국민대)
- 10-17 중국인의 한국인식과 한국의 대중국 공공외교 강화방안 / 이동률(동아연)
- 10-18 한중 양국의 상호 유학생 수용·교육·활용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 문흥호(한양대)
- 10-19 중국 소프트파워 증진 정책의 뉴패러다임연구: 공자학원을 중심으로 / 주성일(명지대)
- 10-20 중국 공산당의 통치수단으로서의 공자산업 활용방식과 전망 / 이강범(중앙대)
- 10-21 붕괴되는 중국 동북3성의 조선족 수진 집체 마을의 재생을 위한 연구 / 이병화(농업개발원)
- 10-22 중·북 접경지역의 도시화와 발전축 형성 동향 / 박인성(한밭연)
- 10-23 조선족의 정체성과 향후 역할에 관한 연구 / 이승률(동북아 공동체연)
- 10-24 한국의 중국학과 중국의 한국학의 연구추세의 비교분석 / 이규태(관동대)
- 10-25 일본의 대중국 연구 현황과 시사점 / 김민수(인천대)
- 10-26 한국내 중국연구 지형도 분석 / 이정남(고려대)
- 10-27 중국 민사법상 토지용익권에 관한 연구 / 석희태(경기대)
- 10-28 중국 관광수요자의 권역별 성향분석에 따른 방한관광 유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현주(한결한)
- 10-29 중국의 미래 내수시장 형성전략과 우리의 시사점 - 중부지역의 4대 도시군 형성전략을 중심으로 - / 지만수(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0-30 중국 내수시장에서 한국 주요 제품 경쟁력 분석 / 이문형(산업연구원)
- 10-31 기후변화 관련 에너지산업 중심의 한중 에너지 협력 방안 연구 / 박용덕(에너지경제연구원)

■ 2010년 정책연구(I)

- 10-32 한중간 산업분업 모델 구축과 한국 서해안권의 산업입지 전략 연구: 지식정보산업을 중심으로 / 권영섭(국토연구원)
- 10-33 중국의 친환경 농식품시장 현황과 전망 / 전형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0-34 중국행정개혁의 성과분석과 미래 정책과제 도출에 관한 연구 / 이재호(행정연구원)
- 10-35 중국 정책연구 수요조사 / 이재호(행정연구원)
- 10-36 중국의 환경문제와 정책에 관한 한·중 공동연구 / 추장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10-37 중국의 대북한 정책: 영향력 평가와 대응방안 / 최수영(통일연구원)
- 10-38 중국 고등교육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력유치 전략 연구 / 윤종혁(한국교육개발원)
- 10-39 중국의 개혁개방 항공전략 기초조사를 통한 협력증진 방안 연구 / 김제철(한국교통연구원)
- 10-40 고령친화용품산업 수요기반 강화를 위한 중국시장 연계방안 연구 / 김수봉(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0-41 한국과 중국의 가족변화와 지원정책(I) / 김혜영(여성정책연구원)
- 10-42 국내거주 중국 조선족 동포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 연구 / 서문희(육아연구소)
- 10-43 중국의 탄소저감 정책동향 및 도시규모별 대응전략 연구 / 오성훈(건축도시공간연구소)
- 10-44 한중 물류협력 연구사업 - 중국 장강지역 진출 방안 수립 연구 / 김범중(한국해양수산개발원)
- 10-45 한중 양국민간 우호정서 저해원인 연구 / 구자역(한국교육개발원)
- 10-46 중국 12차 5개년계획과 주요산업별 한국의 대응전략 / 이문형(산업연구원)
- 10-47 중국 농업의 지역별·품목별 성장 특성 및 시사점 / 전형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10년 정책연구(II)

10-48 국내적 제약요인을 고려한 한중 FTA 협상 전략연구 / 안세영(서강대학교)

10-49 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 - 현대 중국의 분야별 진단 / 백영서(연세대), 강준영(한국외대), 김재철(가톨릭대), 정재호(서울대), 이근(서울대), 김시중(서강대), 임운선(관동대), 정영록(서울대), 정환우(국제무역연구원), 이장규(대외경제)

■ 2011년 기초연구

11-01 중국의 통상법제와 환경법제의 연계연구 / 손기윤(인천대), 이충훈(인천대), 김호(중, 인천대), 리밍(중, 북경대), 왕진(중, 북경대)

11-02 한중수교 이후 주중 재외국민의 범죄 피해 실태 유형추이 분석 / 박성수(세명대), 박주상(대구예술대), 고강(중, 길림공안청)

11-03 중국의 WTO 분쟁 사례 연구 - 중국의 WTO분쟁사안에 대한 종합 평가 및 한국에의 정책 시사점 / 서석홍(부경대), 서창배(신라대), 장지혜(부산외대)

11-04 한중 R&D협력모델 창출방안 연구 / 김원중(동아대), 백권호(영남대), 유병철(동아대), 강준원(동아대), 문철주(동아대)

11-05 재중 한국유학생 및 졸업생 현황과 취업실태 기초조사 / 최규발(고려대), 정지수(고려대)

11-06 중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와 한중 관계의 실질적 개선 방안 / 전성홍(서강대), 이동률(동덕여대), 김재철(가톨릭대), 이희옥(성균관대)

11-07 한중 외교안보군사갈등에 대한 연구 / 김태기(단국대), 김진호(단국대), 조한승(단국대), 김학린(단국대), 임재형(단국대)

11-08 중국 사회보장제도 구축에 노동 법제가 미친 영향력 연구 / 김동하(부산외대)

11-09 중국 기업구조조정(M&A)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윤현석(원광대), 이희성(원광대), 최문옥(중, 중국상해대학)

11-10 중국의 인터넷 확산과 정치개혁 / 이민자(신아시아), 김천규(국토연구원), 이상준(국토연구원), 김흠(국토연구원)

■ 2011년 정책연구

- 11-11 중국 산업의 고도화와 대응전략 - IT산업을 중심으로 / 정상은(한남대), 서봉교(동덕여대), 황진영(한남대)
- 11-12 중국내 분야별 한반도 문제 전문가 명부 작성(성향별) - 중국내 친한파/친북파 인사관리 / 윤경우(국민대), 은중학(국민대), 양갑용(국민대)
- 11-13 중국 정부의 의사결정과정: 행위자, 구조, 과정 중심 / 안치영(인천대), 전인갑(인천대), 이남주(성공회대), 장정아(인천대)
- 11-14 중국의 사법제도 개혁 연구: 법원을 중심으로 / 조영남(서울대)
- 11-15 중국의 토지제도 변천과정과 실태 / 고재모(협성대), 권오박(협성대)
- 11-16 재한 중국유학생 취업실태 조사 및 관리시스템 구축 / 문홍호(한양대), 김인(한양대), 민귀식(한양대), 신영미(한양대)
- 11-17 중국 우주항공 분야정책의 변천과정과 실태 / 김경민(사, 우주정책포럼), 송재익(강남대), 이상현((사)우주정책포럼)
- 11-18 한중 서비스 산업 경쟁력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 박상찬(경희대), 이상철(그리스도대)
- 11-19 중일관계와 일본의 대중국 이미지 제고전략 연구 / 홍정표(서울대), 이종원(일분릿교대), 김익기(동국대), 공석기(서울대)
- 11-20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의 변화와 정책적 함의 / 이규태(관동대), 구광범(관동대)
- 11-21 대중국 경제협력 및 무역투자 활성화 방안 / 이승신(KIEP), 광복선(KIEP), 정환우(KITA)
- 11-22 대중 산업경쟁력 확보전략 / 이문형(KIET), 조철(KIET), 김학기(KIET), 오영석(KIET)
- 11-23 녹색성장 및 에너지안보 관련 - 에너지산업의 대중국 진출전략 / 박용덕(KEE), 이호무
- 11-24 한반도 관련 중국의 협조 확보 방안 / 최수영(KINU), 전병곤(KINU), 홍우택(KINU), 이기현(KINU), 박병관(INSS)



- 11-25 중국인과 한국인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연구: 성인과 청소년 세대 비교 / 윤철경(NYPI), 오해섭
- 11-26 중국 동북지구 구역발전계획의 특성분석 연구 / 김천규(KRIHS), 이상준(NYPI), 김홍(NYPI)
- 11-27 중국대학입시에서의 지역할당제 연구 / 구자역(KEDI), 이준식(성균관대), 박영진(용인대), 이경자(경상대)
- 11-28 한·중 간 인재 육성 및 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 손민정(KICE), 신항수(KICE), 김우석(인하대), 김진공(인하대)
- 11-29 전환기 중국 정치·경제 변화에 따른 중국 교통물류 발전 전망과 우리나라 대응방안 / 서종원(KOTI)안병민(KOTI)
- 11-30 중국 법제의 분야별 시리즈(I) - 중국의 금융법제 연구 / 유예리(KLRI), 박찬호(KLRI), 이준호(KLRI), 김은환(KLRI), 손현진(KLRI), 이정표(부산대), 양효령(전북대), 마광(중, 절강대)
- 11-31 중국의 노인장기요양보호대책의 실태분석과 상호협력체계 구축방안 / 선우덕(KIHASA), 김수봉(KIHASA), 이문형(KIET), 오영석(KIET), 조철(KIET), 김학기(KIET)
- 11-32 가족변화와 가족지원정책(II): 중국가족의 라이프스타일을 중심으로 / 김영란(KWDI), 김혜영(KWDI), 장혜경(KWDI), 김은지(KWDI), 최인희(KWDI)
- 11-33 한중 물류협력 연구사업(중국 주강지역 진출 방안 수립 연구) / 김범중(KMI)
- 11-34 중국정부와 국유기업 및 사영기업의 개혁과 정책에 관한 연구 / 김윤권(KIPA), 이수봉(중), (중국청년정치대)
- 11-35 중국의 물관리 현황과 한·중 협력방안 - 북경·천진시 상하수 분야를 중심으로 / 추장민(KEI), 이운(KEI)
- 11-36 중국 자녀양육 가치관 및 양육 실태 연구 - 한족과 조선족 비교 / 서문희(KICCE), 이윤진(KICCE), 최윤경(KICCE), 박금해(중, 연변대)
- 11-37 중국연구 인벤토리(1999년 이전 자료) / 최호진(KIPA)
- 11-38 GTI 지역상공인간 교역활성화 방안 / 김진기(강원발전 연구소)

■ 2011년 기초심층연구  
(현대중국)

- 11-39 정치분야  
 중국의 중앙 지방 관계: 과정과 변화 / 정재호(서울대)  
 중국 엘리트 정치와 정치구조 / 김재철(가톨릭대)  
 중국의 국가-사회관계의 동학 / 김도희(한신대)  
 중국 체제이념의 변화와 계속성 / 이희옥(성균관대)
- 11-40 경제분야  
 과거의 유산 / 김시중(서강대)  
 중국은 미래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  
 지만수(동아대)  
 미래의 도전 / 은종학(국민대)  
 중국과 세계경제 / 남영숙(이대여대)
- 11-41 사회분야  
 중국인의 인간관계 / 김광역(서울대)  
 포스트 사회주의 중국의 문화 소비와 한류 / 장수현(광운대)  
 현대 중국사회의 구성: 상업문화 및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  
 정종호(서울대)  
 중국 문화유산의 정치학 / 장정아(인천대)
- 11-42 문화분야  
 中國人論 / 백영서(연세대)  
 문화 중국과 중국 사상 / 이옥연(서강대)  
 '中華帝國' 體制와 體制理念의 장기 지속성: 역사학적 접근 /  
 전인갑(인천대)  
 사상으로 본 중국인의 국가 구상: 천하일가와 대동사회의  
 이중주 / 양일모(한림대)

■ 2012년 협동연구

- 한·중 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12-01 중국의 인구고령화 대비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장기요양보호대책 실태분석과 상호협력방안 /  
 선우덕(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양찬미(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병철(중국인민대학교),  
 양입용(중국인민대학교)

- 12-02 중국의 전통의학-양의학 협진서비스 현황 및 전달체계 / 윤강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천재영(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한의학정책연구원), 이준혁(한국한의학연구원), 강승현(한국한의학연구원)
- 12-03 중국의 사회변동과 가족(Ⅰ) -도시이주 농민공 가족을 중심으로- / 김영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최인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보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강승호(국립강릉원주대), 김혜영(숙명여대), 이재호(한국행정연구원)
- 12-04 한·중 청년의 국제관과 문화자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 비교 /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장수현(현대중국학회), 정계영(상해복단대학교)
- 12-05 중국의 중장기 유아교육·보육 개혁 추진현황 연구 / 이윤진(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육아정책연구소), 최은영(육아정책연구소), 朴今海(연변대학교), 白美花(연변조선족자치주교육학원)
- 한·중 교육 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 12-06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정책 사례연구 / 구자역(한국교육개발원), 박영진(한국교육개발원), 안병환(대진대학교)
- 12-07 중국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구 / 손민정(한국교육과정평가원), 조윤동(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장호성(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신지연(영산대학교), 김도경(인하대학교), 주기평(서울대학교), 심형철(창덕여고), 김어진(쑤저우대학교)
- 12-08 한·중 인력이동과 전문외국인력 활용 및 여성관리인력 활용 비교 / <제1부> 한·중 인력이동과 전문외국인력 / 배규식(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  
<제2부> 한·중 양국의 여성관리자 활용 비교연구 / 양인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강민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경환(고려사이버대학교), 방진방(중국인민대학교)
- 12-09 한·중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정책과 동반발전 방안 연구 / 강일규(한국직업능력개발원), 허영준(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병석(서울사이버대학교), 이천우(중국제남대학교)

중국 법·제도 연구

- 12-10 중국 정부의 행정제도와 행정자원 및 정책수단에 관한 연구 / 김윤권(한국행정연구원), 박경래(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해용(신라대학교)
- 12-11 시진핑 시대 중국의 미래 전망과 대응전략 / 이재호(한국행정연구원), 서용석(한국행정연구원), 최호진(한국행정연구원), 홍은기(호서대학교)
- 12-12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한 형법 및 형사정책 대응전략 연구 / 김한균(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신의기(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경찬(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2-13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분야별 법·제도 연구 - 외국인투자·기업·노동 및 환경 관련법을 중심으로 / 문준조(한국법제연구원), 김명아(한국법제연구원), 김은환(한국법제연구원), 강광문(서울대학교), 오일환(중국정법대)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 12-14 중국 전력안보역량강화 관련 한·중 전력시장 협력 및 대중국 전력시장 진출방안 / 박용덕(에너지경제연구원), 이현주(에너지경제연구원), 양광식(한결한주식회사)
- 12-15 중국 하천환경관리 현황 분석 및 한·중 협력방안 / 강택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 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오일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홍용석(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성운(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12-16 중·중앙아시아 국제협력을 활용한 중국 서부물류시장 진출전략 / 이주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형근(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범중(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찬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근섭(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은수(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강지현(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명아(한국법제연구원), 葛炬(신장농업대학교), 董千里(장안대학교), 许茂增(충청교통대학교)
- 12-17 중국 동북지역 교통체계 발전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 서종원(한국교통연구원), 안병민(한국교통연구원), 노상우(한국교통연구원), 김천규(국도연구원), 장동명(랴오닝대학교), 윤승현(연변대학교)

■ 2013년 협동연구

12-18 중국 중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 및 대응전략 연구 / 김천규(국토연구원), 김홍(국토연구원), 김원배(중앙대학교), 신태용(서울대학교), 서종원(한국교통연구원)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12-19 중국 축산업의 성장특성 및 지역화 정책 연구 / 전형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어명근(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창범(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남민지(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은영(한국농촌경제연구원), 王济民(중국농업과학원)

12-20 중국 방송통신 규제체계 분석 및 전망 / 윤석환(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성욱(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윤희(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중 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3-01 중국의 중약 자원 관리현황과 세계화 전략 / 윤강재(한국보건사회연구원)

13-02 중국의 사회변동과 가족(II) - 가정소비를 통해본 중국인의 가족생활 / 김영란(한국여성정책연구원)

13-03 한국과 중국의 성평등 현황 및 여성의 복지 고용정책 비교연구 / 박수범(한국여성정책연구원)

13-04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중 교육 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13-05 중국의 ECEC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이용 및 운영 실태연구 / 이윤진(육아정책연구소)

13-06 중국 천인계획 연구 / 구자역(한국교육개발원)

13-07 중국 조선족 청년의 이주와 노동시장 진출 연구 / 배규식(한국노동연구원)

13-08 중국의 기업대학 제도 및 운영 현황 분석 연구 / 강일규(한국직업능력개발원)

중국 법·제도 연구

13-9 對중국 정책의 범정부 협력네트워크 강화방안 / 이재호(한국행정연구원)

13-10 중국 정부의 공무원 인사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 /  
김윤권(한국행정연구원)

13-11 중국 진출기업의 분쟁사례와 법적용에 관한 연구 /  
문준조(한국법제연구원)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13-12 중국 서부물류시장 진출 전략 수립: 중-동남아시아 국제협력의  
활용을 중심으로 / 이주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13-13 중국 철도 발전에 따른 한중 협력 및 대응 방안 /  
서종원(한국교통연구원)

13-14 중국 서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 및 도시경쟁력분석 연구 /  
김천규(국토연구원)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13-15 중국 해외석유가스 개발 추진현황과 한-중간 해외자원개발  
협력전략 / 박용덕(에너지경제연구원)

13-16 한·중 대기오염 저감 관리 비교와 협력방안 /  
강택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3-17 중국 인터넷기업 해외진출에 따른 한중 협력방안 연구 /  
김성욱(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14년 협동연구

한·중 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4-01 중국방문요양서비스(Home-help service)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북경지역을 중심으로 / 선우덕(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02 조선족여성의 경제활동실태와 인력활용방안 /  
김원홍(한국여성정책연구원)

14-03 한중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과 중독예방 및 치료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 이창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4-04 국내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현황 및 양육가치관 연구 /  
최윤경(육아정책연구소)

한·중 교육 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14-05 중국의 외국유학생 유치정책 및 사례연구: 대학을 중심으로 /  
구자역(한국교육개발원)

14-06 중국 양안간 인적자원분야의 교류·협력 현황과 성과 연구 / 강일규(한국직업능력개발원)

중국 법·제도 연구

14-07 한-중 경험 강화를 위한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현황과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 김명아(한국법제연구원)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14-08 중국 환발해지역 발전계획의 특성 및 도시경쟁력 분석 연구 / 김천규(국토연구원)

14-09 중국 동북부물류시장 진출전략 수립: 중국-북한과의 국제협력의 활용을 중심으로 / 이주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14-10 중국 가스산업의 발전 현황과 대중국 가스산업 진출 전략 / 박용덕(에너지경제연구원)

14-11 중국의 곡물산업 동향과 한중 식량안보 협력방안 / 정정길(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15년 협동연구

한·중 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5-01 저출산 대응 이민정책 전략 수립 연구 - 중국인 유학생 인력 활용 모색을 중심으로 / 김영란(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중 교육 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15-02 중국 유아교원 양성 및 현직교육 제도와 실태연구 / 문무경(육아정책연구소)

15-03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산업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방안 / 강일규(한국직업능력개발원)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15-04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활용방안 - 항만분야를 중심으로 / 이주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15-05 신기후체제에 따른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산업동향과 한·중 협력 방안 / 박용덕(에너지경제연구원)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 2016년 협동연구

- 15-06 한·중 환경사고 대응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  
추장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15-07 중국의 농산물 수급구조 변화와 대한국 수출 확대 가능성 분석 /  
정정길(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5-08 중속성장 중국경제와 한중경제협력 /  
이장규(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중 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16-01 중국과 대만의 중의학(中醫學)-서의학(西醫學) 관계 설정  
현황과 시사점: 인력양성과 보장성을 중심으로 /  
윤강재(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중 교육 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 16-02 13·5계획시기 중국 제조업 고용관계의 변화 /  
조성재(한국노동연구원)
- 중국 지역발전예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 16-03 중국 13·5계획시기 중국물류의 발전전망과 우리의 활용전략 /  
이주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 16-04 일대일로에 대응한 초국경 개발협력 추진전략 연구: 중·몽·러  
경제회랑을 중심으로 / 이현주(국토연구원)
-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 16-05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중국의 에너지효율 정책과 한·중  
협력방안 / 박용덕(에너지경제연구원)
- 16-06 농식품 가공 및 유통 산업분야의 한·중 협력방안 연구: 중국의  
일대일로 지역을 중심으로 /  
어명근(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6-07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 이동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으로 /  
추장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16-08 중국경제의 구조변화와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  
이장규(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7년 협동연구

한·중 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7-01 젠더 관점에서 한·중 건강상태 비교 및 보건정책 개선 방안 / 김영택(한국여성정책연구원)

17-02 중국의 출산·육아 정책 및 실태 분석: 북경, 연변 지역을 중심으로 / 최은영(육아정책연구소)

한·중 교육·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17-03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문화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배상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중국 법·제도연구

17-04 중국의 사회조직에 관한 연구 / 김윤권(한국행정연구원)

중국 지역발전예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17-05 한반도와 북방지역 연계강화를 위한 접경지역 개발협력 방안연구: 훈춘 일대를 중심으로 / 이현주(국토연구원)

17-06 중국 동북지역과 연계한 남북중 신(新)인프라 전략 연구  
-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중국 일대일로 연계를 중심으로 / 서종원(한국교통연구원)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17-07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 고정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으로 / 추장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18년 협동연구

한·중 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8-01 이주배경 청소년의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중국 출신 청소년을 중심으로 / 배상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8-02 한국과 중국의 인구정책 변화와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가치관 비교연구 / 김영란(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중 교육·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18-03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정책과 교류 협력 방안 / 강일규(한국직업능력개발원)

중국 법·제도연구

18-04 중국 반부패의 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 /  
김윤권(한국행정연구원)

중국 지역발전예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18-05 동북아(남·북·중·러) 철도 관광벨트 구축방향 연구  
- 중국 동북지역의 초국경 관광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  
서종원(한국교통연구원)

18-06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과 상생협력모델 연구 /  
정정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18-07 한·중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비교 및 협력방안 /  
김호석(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8-08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40년 평가와 전망 /  
양평섭(대외경제정책연구원)

18-09 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전략: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대응을  
중심으로 / 양평섭(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9년 협동연구

한·중 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9-01 중국 청소년의 한류 인식 및 수용 실태 연구 /  
배상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중 교육·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19-02 과학기술분야 여성인력양성에 대한 한·중 실태 분석 연구 /  
오은진(한국여성정책연구원)

19-03 중국 유치원 평가제도와 실태 분석 연구 /  
문무경(육아정책연구소)

19-04 중국 디지털 기술 발전과 고용관계: 한중 기업사례를 중심으로 /  
노세리(한국노동연구원)

중국 법·제도연구

19-05 중국의 국경운영에 관한 연구: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를 중심으로 /  
김윤권(한국행정연구원)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19-06 중국 자유무역시험구를 활용한 우리 물류기업의 진출 방안 연구  
- 중국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 /  
김범중(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19-07 중국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정책 및 시사점 /  
전형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08 한·중 탄소 배출권거래제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  
추장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내 정치 및 국제 관계에 대한 한·중 협력방안 모색

19-09 현대 중국외교의 네트워킹 전략 연구:  
집합, 위치, 설계 권력을 중심으로 /  
허재철(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0년 협동연구

한·중 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20-01 중국의 육아 소비문화와 한국 엔젤산업의 대응전략:  
육아용품을 중심으로 / 최효미(육아정책연구소)

한·중 교육·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20-02 중국 정규교육의 성인지성과 여성인력 양성 연구:  
과학기술분야를 중심으로 / 오은진(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3 중국의 인공지능(AI) 교육 동향 탐색 /  
손민정(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4차 산업혁명 시대 중국의 신기술 인재양성 정책 연구:  
초·중·고 인공지능 교육분야를 중심으로 /  
박동(한국직업능력개발원)

중국 법·제도연구

20-05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와 기업 관계를 중심으로 / 김윤권(한국행정연구원)

중국 지역발전예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20-06 중국-유럽 화물열차(CRE, China Railway Express) 이용실태  
분석 및 우리 기업의 이용률 제고방안 /  
김근섭(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중국의 초국경 경제협력구 조성협력 및 활용방안 연구 /  
이현주(국토연구원)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20-08 중국의 농식품 무역과 통상분쟁 연구 /  
전형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정책의 시사점 연구 /  
허예진(에너지경제연구원)

20-10 중국의 계절관리제 관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정책  
분석 및 한중 협력 방안 연구 /  
이승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내 정치 및 국제 관계에 대한 한·중 협력방안 모색

20-11 중국의 일국양제 20년 평가와 전망 /  
허재철(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1년 협동연구

한·중 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21-01 여성 기업인 성장에 대한 한·중 비교 연구 /  
김종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

21-02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한·중 청소년 생활실태 및 가치관 비교연구  
/ 배상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1-03 신기술 확산이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에 관한 한중 비교 /  
조성재(한국노동연구원)

한·중 교육·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21-04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국 교육 발전 방향 탐색  
- 14차 5개년(2021~2025) 계획과 교육 현대화 /  
손민정(한국교육과정평가원)

21-05 언택트 시대 중국의 유아 조기교육 실태와 대응 방안:  
북경 지역을 중심으로 / 최효미(육아정책연구소)

21-06 중국의 대학 인공지능 교육과 창취(創畵) 창업 정책 연구 /  
박동(한국직업능력연구원)

중국 법·제도 연구

21-07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해양 행정 및 정책을 중심으로 / 김윤권(한국행정연구원)

중국 지역발전예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21-08 중국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및 진출전략 연구: 송안신구 및 텐진에코시티 사례를 중심으로 / 이현주(국토연구원)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21-09 세계 주요국 탄소중립 전략과 중국의 저탄소 전략의 비교 분석 / 이성규(에너지경제연구원)

21-10 RCEP 출범에 따른 공급망 변화와 한중 국제물류에 미치는 영향 비교: 해운·항만 서비스 교역과 공급자 중심으로 / 박성준(한국해양수산개발원)

21-11 중국의 2060 탄소중립 추진전략 연구 / 김성진(한국환경연구원)

중국의 국내 정치 및 국제관계에 대한 심층 연구

21-12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 유형 및 영향 요인 분석 / 허재철(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2년 협동연구

22-01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규제의 제도와 정책을 중심으로 / 김윤권(한국행정연구원)

22-02 미·중 간 곡물 분쟁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 이두영(한국농촌경제연구원)

22-03 미중 전략경쟁 내 중국 탄소중립 대외전략과 시사점 / 강택구(한국환경연구원)

22-04 중국의 수소에너지 산업 지원 정책과 한·중 협력 방안 / 이상림(에너지경제연구원)

22-05 미중 전략경쟁시대 북중관계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 정은이(통일연구원)